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

남 - 북 - 협 - 력 - 포 - 럼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2020. 5. 25.(월), 14시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주 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주 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전문가의 개인의견으로 주최기관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순서

* 사회 : 김수일 경기지역회의 간사

■ 개회식 14:00

- 국민의례
- 인사말 (장영란 민주평통 경기부위원장)
- 축사 (이승환 민주평통 사무처장)
- 축사 (강영식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토론회 14:20

- 사회 : 최완규 (전)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주제발표
 - ①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
-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 ② DMZ 평화관광 현황과 활성화 방안
-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부회장
- 지정토론
 -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 박병직 한반도평화관광포럼 대표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 질의응답

■ 폐회 16:20

목 차

▣ 주제발표	7
○ 송 영 훈	9
○ 나 효 우	21
▣ 지정토론	31
○ 김 영 규	33
○ 박 병 직	38
○ 이 해 정	47
○ 조 한 범	55
○ 함 보 현	62

주제 발표

- 송영훈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장
- 나효우 착한여행 대표, 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부회장

남북 접경지역 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

송 영 훈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전문
중에서(2020.05.10.) -

1. 문제제기

남북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렸던 2018년과 달리 냉랭한 남북관계가 지속되었던 2019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남북의 ‘협력’은 없고 대담 없는 정책과 구상만 제시되고 있었다. 남북관계가 주춤하는 사이 총선이 다가왔고, 청와대와 여당은 남북협력을 실행하기 위해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하였다. 총선 이후 강릉-제진 구간 동해북부선철도 건설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5.24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제기되면서 남북협력의 재개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남북관계의 개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남북협력이 북미관계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서 남북협력의 진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치적 결단이 요구된다. 미국의 대선까지 약 6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정치적 판단은 ‘구상’을 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실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정책적 전환 요구된다.

정책실험의 장으로서 접경지역과 DMZ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정책적, 학술적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동안의 많은 정책담론들은 이 넓은 공간의 다양한 속성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형성되었다. 그 결과 접경지역과 DMZ와 관련된 많은 정책적 구상들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거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책적 효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는 지역사회는 쉽게 대상화되었다.

접경지역 관련 정책은 이 지역의 자연지도, 행정지도, 인문지도의 불일치에 따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어려움이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강원도인 경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사람들의 주요 생활권이 다르고, 공룡선거구의 탄생으로 인해 지역 민심을 어떻게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존재한다. 그리고 접경지역은 군사안보의 이유로 정확한 국토정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장기반 실현 가능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제한이 있다.

법률적 정의를 벗어나 ‘접경’의 의미를 확대하면 동해안과 서해안의 철책도 주민들의 생활반경을 제한하는 경계로 인식될 수 있다. 어업활동이 제한되고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정동진과 심곡항을 잇는 바다부채길과 같이

철책에 따른 자연 접근의 제한을 없앴을 때 지역의 위기는 기회로 바뀌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접경의 의미를 확장적으로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도 한 편에서는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DMZ에 대한 인식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즉 DMZ 전체를 단일한 속성을 가진 공간이라고 전제하는 정책담론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의 그뤼네스반트를 모델로 DMZ의 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아가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는 것이다.

DMZ는 지금까지 군사안보의 이유로 파괴가 진행되어 온 공간이며, 분단 고착화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생태환경을 보전해야하는 공간이며, 남북협력을 위해 개발행위가 이뤄져야 하는 공간이며, 과거의 모습을 복원해야하는 공간이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DMZ라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이 지역을 파괴, 보전, 개발, 복원의 측면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DMZ에 대한 자연, 인문, 생태 등의 공간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나가는 사업이 점차 중요해 질 것이다.

2.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쟁점과 과제

현재 남북 접경지역 간 구체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준비를 하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협력’은 파트너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일방의 수요와 필요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70년 가까이 이어진 분단에 의해 대립과 갈등의 상징적 지역으로 이해

되어 온 남북의 공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협력사업을 구상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선, 북한은 접경지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정보는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남북한이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한 북중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뤄졌지만, 남한과 접하고 있는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북한도 남북 접경지역에 군사배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쉽게 공유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공간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협상을 통해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남북 접경협력을 위해서 군사시설의 재배치가 가능할 것인가 혹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건설시 북한은 스스로 군부대를 재배치했었다. 앞으로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해서 남과 북이 어느 정도까지 군사지역을 개방할 것인가는 사업의 효과를 제고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규모와 전개 방식 등이 매우 전략적으로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의 주체와 재정의 부담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2018년 이후 접경지역의 지자체들이 대북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였지만, 직접사업이 불가능해지자 대부분 도로 정비 또는 통일관 건설과 같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 또는 건축과 관련된 사업들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계획단계에만 머무르는 경향이 있었다.

넷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은 지역사회의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지원하거나 대북사업을 하고 있다는 상징성만을 갖는 사업들은 협력이 본격화될수록 사라져야 할 것이다. 즉 협력사업을 통해 남측의 접경지역에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접경지역 협력을 과거의 복원이라는 관점보다 현재의 상황을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분단으로 인해 잊혀져가는 접경지역의 과거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지금 이 지역의 저발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건에서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협력사업이 필요한 것이다.

여섯째, 남북 접경지역 협력은 지역주민들의 인간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경제적, 정치적 이해에 따라 결정된 남북 협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협력의 각 주체들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몇 가지 남북 접경지역 협력을 위한 사업과 추진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북한 접경지역 특정 군에 대한 패키지형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강원도 고성군의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 환경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한 마을의 종합개발을 위해서 상하수도, 전기, 통신과 같은 시설작업은 물론 주택개선, 작업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농업 분야 특산물 재배 기술 환경 구축 협력도 이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

둘째, 남북 접경지역의 협력으로 상호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력발전을 위한 협력이다. 공유하천 관리의 중요성은 반복해서 논의가 이뤄져왔는데, 그것은 홍수와 기타 재해예방의 차원에서 많이 이뤄졌지만, 전력생산과 관련한 논의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임남

댐의 물을 북한강으로 방류하면서 북한에서도 전력을 생산하지만 남한에서도 그 물을 활용하여 발전량을 증가시켜 편익을 본 것에 상응하는 만큼 북한에 보상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남북한 전력량 증가에 의한 경제적 편익을 발생시키고, 용수공급량 증대, 하천기능 복원 및 수질개선 등의 비계량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접경지역의 보건, 방역 협력은 남북한 모두에 필요한 것이다.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의 발표를 그대로 믿기에는 어렵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방역 관련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접경지역 중심으로 K-방역 모델이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넷째, 접경지역 재난관리 예측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이 중요하다. 재난의 위험은 국경과 대륙을 넘어선다. 각종 재난은 인류 모두에게 보편적이고 잠재적인 위험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각종 재난에 대한 남북협력은 절실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재난에 대한 북한의 취약성은 남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따라서 북강원도의 재난 징후의 감시, 분석, 예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재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위성 영상, 항공 사진, 드론 영상 등 이미지 기반의 상황정보를 활용”¹⁾할 수 있으며, “재해지도와 위성 영상 이미지는 재해상황 대응 이후 수습 및 복구에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4월 고성-강릉산불 시에도 공간정보를 활용했다. 향후 재난관리에서 공간정보기술의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접경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접경지역 내 규제해소가 진행되어야 한다. 접경지역의 토지이용규제를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중으로 살펴보면, 산지 관련 규제(79.0%)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군사(62.8%), 환경(13.5%), 농지(8.6%), 교육·문화(5.8%), 지역개발규제(1.3%)의 순으로 나타

1) LX 공간정보연구원,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큐브로 위험사회를 인지하고 대비하자” 『공간정보』, 제24호(2019), pp. 18-19.

난다. 용도지역·지구의 유형별 면적은 4,315.0km²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면적이 가장 넓고, 그 다음이 보전산지(3,875.3km²), 준보전산지(612.4km²), 농업진흥구역(584.7km²)의 순이다. 이들 4개의 용도지역·지구는 접경지역 전체 용도지역·지구 지정 면적의 78.6%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접경지역 10개 시·군에 걸쳐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 토지 이용규제 사항에 해당된다.

산지와 농지 및 군사 중심의 토지이용규제가 상대적으로 더 큰 이유는 접경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서, 강원도의 경우에는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대표적 생태지역이다. 접경지역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발표한 자료(접경지역규제해소 연구, 2015)에 따르면, 강원도 내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전반적인 인지정도는 다소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규제에 대해서만 지역민의 과반수 이상이 인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군사규제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이 접경지역 지역사회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군사규제에 따른 토지이용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이 요구되며, 이외에 토지이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산지규제, 농지규제, 환경규제 등에 대한 지역사회적 공유가 필요하다. 향후, 접경지역내 LX의 역할이 토지 이용규제에 따른 주민피해민원 처리과정의 진단과 함께 지역민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보상 및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에서도 필요할 것이다. 토지이용규제해소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예, 남북강원도 접경지역내 규제프리존의 도입)를 통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실현을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3.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쟁점과 과제

DMZ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군사적 이유로 기존의 파괴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한국 전쟁 이후 새롭게 형성된 생태 환경을 보존해야하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DMZ와 DMZ를 통한 남북협력을 위해 도로, 철도,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해 개발이 필요한 공간도 있다. 넷째, 과거 유적과 역사를 복원해야하는 공간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고 향후 이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 접경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가칭 'DMZ관리공단'과 같은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하나로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남쪽·북쪽 각 2km에 해당하는 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창설하고, 이 기구에 의해서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단형식의 기구를 설치하면 좀 더 포괄적인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DMZ 관리공단화의 필요성

- 책임성과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관리운영으로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윤추구가 아닌 공공복리 증진을 추구하는 관리조직으로서 공단의 역할이 중요
- 공단은 책임경영체제로 산재되어 있는 시설물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고 지원서비스 수준의 고도화 실현
- 민간기업에 맡길 경우 공익성 저하 등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영을 원칙으로 하는 공단이 필요
- 발생하는 이익을 시설개량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환원하고 지역상황 및 지역정책에 맞는 사업운영이 요구됨

■ DMZ관리공단의 법적 근거

- DMZ관리공단의 설립근거 규정인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따라 공단은 DMZ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홍보 및 남북강원도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자연생태계 등 보전가치 증진사업, 토지매수·관리, 정보화 등 전문적인 운영을 통하여 종합적인 국토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현행 이 법 제10조2), 제11조3)의 조문을 통합하고, 내용을 확대·개정하여, 이 조항에 근거하여 관리공단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과제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각 지자체별 개별 단위사업중심으로 운영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리와는 괴리되어 있는 실정임.

2) 제10조(접경지역발전협의회)

①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는 접경지역발전협의회를 둔다.

1. 접경지역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의 개발
2.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 그밖에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② 접경지역발전협의회는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1조(접경지역발전기획단)

① 접경지역 발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12. 2.>

1.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접경특화발전지구의 지정·운영에 관한 제도의 입안·기획
3.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관 간 협조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5. 그밖에 접경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접경지역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둘째, 접경지역과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뢰 제거이다. 접경지역 주민들 중 대인지뢰의 피해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도 대인지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뢰가 어디에 매설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 높이고 있다.

지뢰를 제거의 과정 자체를 국내외적으로 공유하면서 DMZ의 평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지뢰를 제거한 자리에 민간 기부자의 이름으로 나무를 심기 운동을 함으로써 과거 파괴의 공간이었던 DMZ를 생태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DMZ의 특정 공간을 거대한 '지뢰박물관'으로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인지뢰피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하여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DMZ 개발의 과정에서 냉전과 분단의 현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즉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고, 어떻게 분단의 기억을 재현할 것인가는 접경지역 박물관의 매우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다. 박물관의 재현은 서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박물관 학예사들만이 아니라 역사, 정치, 사회, 인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장기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 박물관을 조성하는 것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의 컨셉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달라질 수 있다.

넷째, 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사업에 추모의 공간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전쟁은 남북한만의 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었다. 그리고 전쟁 당시에 아군과 적군이 있었지만, DMZ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 참전국 전사자에 대한 추모의 공간마련과 더불어 북한군과 중국군의 희생을 위로하는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공간을 국제적 화해의 공간으로 상징성을 갖춰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화살머리고지를 포함하여 DMZ 평화의 길 관광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모든 것이 완성된 형태로 민간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조성되는 과정 자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하여 한 번 방문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방문해도 남북관계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할 유인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맺음말

접경지역의 협력과 DMZ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도 제 각각이다. 이 발제도 아이디어 구상의 차원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 것에 불과하다. 더 다양한 집단지성이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접경지역과 DMZ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군사안보의 이유로 남과 북은 접경지역의 정보를 민간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어쩌면 진지하게 공간정보가 수집이 된 적이 있었는지도 의문이 들 정도이다. 공간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활용 방안을 논하는 것은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한다.

다음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정상이 과감하게 DMZ 공간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조사 진행을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군사적인 이유로, 국내외적 정치적인 이유로 매우 지난한 일이며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일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되는 많은 것들은 희망적 사고에 근거한 것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는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고 섬나라처럼 지낼 수 없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가 조금씩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실험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열어줘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유효하지만 선도적으로 협력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도 없을 것이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전략은 결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앞으로 정부가 남북협력을 주도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와 국제사회 환경 변화도 이뤄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DMZ 평화관광 현황과 활성화 방안

나 효 우
(착한여행 대표)

DMZ 평화관광과 활성화 방안

나 효 우
착한여행 대표, (사)남북평화관광협의회 부회장

1. 비무장지대(DMZ) 관광 현황

DMZ 인접 3개시도(인천, 경기, 강원)의 10개 시·군 중심으로 안보·평화, 생태관광 진행, 약 40여개의 관광자원 분포

※ '17년 국방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안보·평화관광 연간 방문객
약 220만명(외국인 약 22만명)

- ▶ 경기도 파주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방문객이 가장 많음

DMZ 안보·평화관광 현황 : 경기도 파주지역 위주, 반일코스 중심

○ 주요코스

-서울 → 임진각 공원 → 자유의다리 → 제3땅굴 → DMZ 영상관 및 전시관 → 도라전망대 → 도라산역 → 서울

○ 소요시간 및 비용 : 반일(4~6시간), 1인당 50,000~65,000원 수준

○ 관광절차 : 지자체·관광지별 운영 및 방문방법 상이

- 민통선 북쪽의 경우 신분증 소지하고, 셔틀버스 이용 또는 인솔자 대동한 경우만 허용되는 장소도 존재(파주 제3땅굴, 철원 평화전망대 등)

주요 기관·지자체별 DMZ “안보/평화관광” 운영 현황

운영기관	구분
경기관광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자전거투어, DMZ청소년탐험대, 평화통일마라톤 등 DMZ ‘캠프 그리브스’를 리모델링, 2013년부터 민간인 통제 구역내 유일한 체험형 숙박시설
코레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화열차 DMZ - 도라산 평화관광, 철원 평화투어, 연천 드리밍투어
경기도 파주시 (관광객의 90%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안보관광버스 ※ 30인 이상 단체 전세버스 이용 가능(사전예약) - 매일 운영(9,200원), 임진각 DMZ 매표소에서 표 판매
강원도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석정 출발 안보투어, 백마고지역 출발 안보투어 등 - 제2땅굴, 평화전망대, 월정리역, 노동당사, 승리전망대, 백마고지 등
강원도 고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일전망대, DMZ 박물관, 6.25전쟁 체험전시관, 화진포의 성 등

주요 기관·지자체별 DMZ “생태관광” 운영 현황

운영기관	구분
DMZ 생태관광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진각 평화누리 내부에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문체부)의 하나로서 생태관광의 거점
강원도 양구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생태탐방 - 두타연 생태탐방로, 십년 장생길 자연생태코스
강원도 철원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생태평화공원 - 환경부·국방부·철원군이 공동협약을 맺고 개방한 코스
경기도 연천군 생장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 생태체험 코스 - 파주시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DMZ/접경지역 걷기여행을 위한 다양한 기반시설 및 노선 구축 - 평화누리길(2010.5):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대한민국 최북단의 걷는 길 - DMZ, 통일을 여는 길 조성 계획(2018.12): 인천 강화군~강원 고성군 접경지역 10개시도 456km

비무장지대(DMZ) 관광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관광을 위한 절차적·행정적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신분증 지참이나 방문신청서 작성 등의 복잡한 과정 요구
지자체·관광지별 운영방법 및 방문 시 요구사항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우에 따라 예약이 필수이거나 셔틀버스 탑승 및 상주인솔자 동행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 다수 존재 - 방문절차의 용이성 및 접근성이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임
안보 위주의 관광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대적인 안보 위주의 관광콘텐츠 구성 - 예) 제3땅굴 홍보영상: 자극적이고 적대적인 스토리 위주로 구성
인프라 구축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관광지에 비해 콘텐츠나 기념품이 미비하며, 숙박시설이나 음식점 등 분대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
돌발적 상황 발생 및 사전공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사회적 돌발 상황에 따른 변동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음 - 당일 관광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나,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에게 불편 야기

DMZ 관광 활성화 방안

-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재정비 및 관광여건, 관광상품 개선 필요
- 신규 관광코스과 체험관광 콘텐츠를 확충하여 관광객 니즈에 대응

DMZ 관광 원스톱 서비스 구축·운영

- DMZ 평화관광을 매개로 한 관광 거버넌스 형성 유도
 - 접경지역 지자체 간 협력으로 공동으로 관광서비스 체계 구축 운영

○ 평화관광 중심 DMZ 신규 관광코스 및 체험콘텐츠 개발

- 시범 철수한 GP(경계초소)를 방문하는 신규 관광코스 개발
- 파주 LCD 공장 견학 등 파주시 - 개성시 경제협력을 통한 산업관광과 연계하여 평화관광 확대 추진
- 클러스터 구성 홍보 → 「평화 경제관」마련 추진으로 관광코스 연계
- 거점 별 전문 해설사 양성·배치로 관광객들의 만족도 제고

○ 문화·예술·스포츠이벤트 행사 기획·운영

- 걷기, 마라톤, 자전거, 음악 등의 계기성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 DMZ 해설을 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급

- DMZ 관광 거점 곳곳에 QR 코드 부착, 해설프로그램 지원

○ DMZ 관광정보센터 조성 및 운영

- DMZ 홍보 및 예약이 실시간 가능한 관광정보센터 운영
- 해당 관광 에이전시의 예약, 픽업 서비스 연결, 접경지역 현지 숙소 연결, 교통편 등 평화관광 관련 모든 정보와 예약서비스 제공

2. 공동경비구역(JSA) 관광 현황

○ 주요 관광지역

- 남측지역 : 자유의 집, 평화의 집, 도보다리, 초소 등
- 북측지역 : 판문각, 통일각, 72시간 다리
- 공동지역 : 정전회담장, 보더라인, 기념식수, 돌아오지 않는 다리

○ 관광코스

- 서울 → 파주 통일대교(신분증 검사) → 캠프 보니파스(검문, 브리핑)
→ UN 버스 환승 → 자유의 집 하차 → JSA 관광 → 중식(임진각)

○ 운영주체 : 유엔사에서 공식 지정한 6개 업체

- 판문점트레블센터, 중앙고속, 대한여행사, 국제문화서비스클럽, 코스모진여행사, 코리도어여행사
- 타 민간업체는 DMZ 관광과 연계하여 상품판매, 6개 업체에 수수료 부담, JSA 현장에서 인계·진행

관광절차 : 외국인 위주로 운영 (개별방문 불가)



JSA 관광 2019년 10월 이후 전면 중지

- 사유 : 아프리카 돼지열병 타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강화 조치

공동경비구역(JSA) 관광의 문제점

구분	문제점
폐쇄적·제한적이며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관광객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방문은 허용되지 않으며 단체관광 및 외국인 중심으로 진행 • 외국인: 출입 3일 전 신분증 제출, 한국인: 3개월 전 신원확인
관광을 위한 절차적·행정적 복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의 허가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 한국인의 경우 최소 2개월(여행사 경우 3개월) 전 명단을 통일부와 국정원에 차례로 제출하여 신원확인 필요 • 외국인은 출입 3일 전 신분증 제출
유엔사 지정·허가한 6개 여행사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 지정 여행사의 견학버스 외에는 접근 불가능 - 타 관광업체에서 모객한 희망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인수 - 진행 (타 관광업체 → 6개 업체 수수료 지급)
비싼 가격 및 인원파악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사 지정업체 수수료로 인해 약 65,000원에 진행되는 DMZ 투어에 비해 더 높은 가격 책정 - 외국인 DMZ + JSA투어: 135,000~145,000원, 외국인 JSA투어: 95,000~100,000원
관광객 수 총량 제한으로 인한 상품 개발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수요 및 관심은 높아진 반면, 공급(쿼터)은 총량 제한 (1일 400명) • 방문객 통계 파악 불가, 쿼터부족으로 외국인 관광객 불평
단조로운 견학 위주의 짧은 관광 시간과 부족한 관광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공간이 한정되어 짧은 시간(30~40분 이내) 머무르는 상황 • 다양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단순 견학 위주로 운영 • 기념품, 식음 서비스 등의 관광인프라 및 체험 콘텐츠 절대 부족
돌발적 상황 발생 및 사전공지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발적 상황 발생과 사전공지 미흡으로 활성화 어려움 - 당일 관광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나,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아 관광객에게 불편 야기 • 당일 관광금지가 취해질 경우를 대체할 투어코스 개발 미흡

공동경비구역(JSA) 관광의 활성화 방안

- 한국인 신원조회 절차 및 소요기간 단축으로 실질적 관광향유 기회 제공

○ 외국인 관광객 총량 확대를 위한 추가 쿼터 허용

- 유엔사 공식 승인 여행사 및 쿼터 수를 관광전문 비영리법인 등으로 대폭 확대 필요

※ 쿼터 확대에 따른 관리인력 추가(현재 사병 1명 운영) 및 운영시간 확대 검토

○ 비영리 관광전문기관의 체계적 위탁·관리로 공익성, 전문성 제고

- 여행사 선정기준 및 조건마련 후 통일부 산하 비영리 관광전문기관의 체계적 위탁·관리 (인간안보 유지된 상태에서 안정적이고 유연한 운영 가능)

- 6개 여행사에서 형평성 제고 및 질적 수준 향상

JSA 지정여행사 선정기준 제고(제안)

통일부 산하 비영리 관광전문기관 회원사, 단순 예약접수 업무 외 홍보마케팅기능 업체

○ JSA 내 관광편의시설 및 관광 콘텐츠 확충

- 자유의 집 1층 편의시설 내 매점을 스마트관광 안내 및 기념품샵 수준으로 리뉴얼
 - ※ 남북한 평화관계를 상징하는 전용 기념품 개발
-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체코스 개발
 - 예시) 대성동 '평화마을관광' 콘텐츠개발

○ JSA 스토리텔링 및 다양한 언어의 전문 해설사 양성

- 역사적 사건과 의미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하여 전문 해설사를 양성, 해설프로그램 운영으로 관광객들에게 생생한 스토리 전달(비영리법인)

○ 돌발 상황에 따른 관광금지 조치시 즉각적인 사전공지를 위한 핫라인 개설

3. DMZ 평화관광 VR체험관 구축 사업

○ 사업배경

- 남북한간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른 DMZ지역 평화관광지를 조성하여 화해분위기 및 평화교육 조성
- 동남아 등 많은 외래관광객들이 DMZ투어를 즐기고 있어 이에 따른 관광 수요 증가 예상

○ 필요성

- DMZ 지역주민은 개발 제한 지역으로 인하여 재산권 제한 등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대책 필요
- 대부분 농업에 종사는 농업민의 경작지에 대한 자유로운 출입이 어려워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DMZ 체험관 건립으로 어린이들에게 평화 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
- DMZ 체험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지대함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가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최첨단 VR(인터랙티브 방식)을 통한 DMZ지역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DMZ지역내에 생존하는 동/식물들을 인터랙티브 방식(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체험관을 구축하여 전세계인이 방문하여 평화의존을 체험할 수 있는 운영

DMZ 평화관광 VR체험관 사업 추진방향

○ DMZ VR체험관 구축

- DMZ에 대한 다양한 평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전시
- DMZ 전쟁과 평화체험 프로그램 (GP경험, 배낭경험, 병영체험 등)을 개발하여 활용

○ DMZ 전쟁기록과 평화의 미래 전시관 구축

- DMZ에 관련 단순한 전쟁 기록물을 전시에서 평화의 미래를 표현하는 공간
- 세계 전쟁과 평화를 위한 역사 기록물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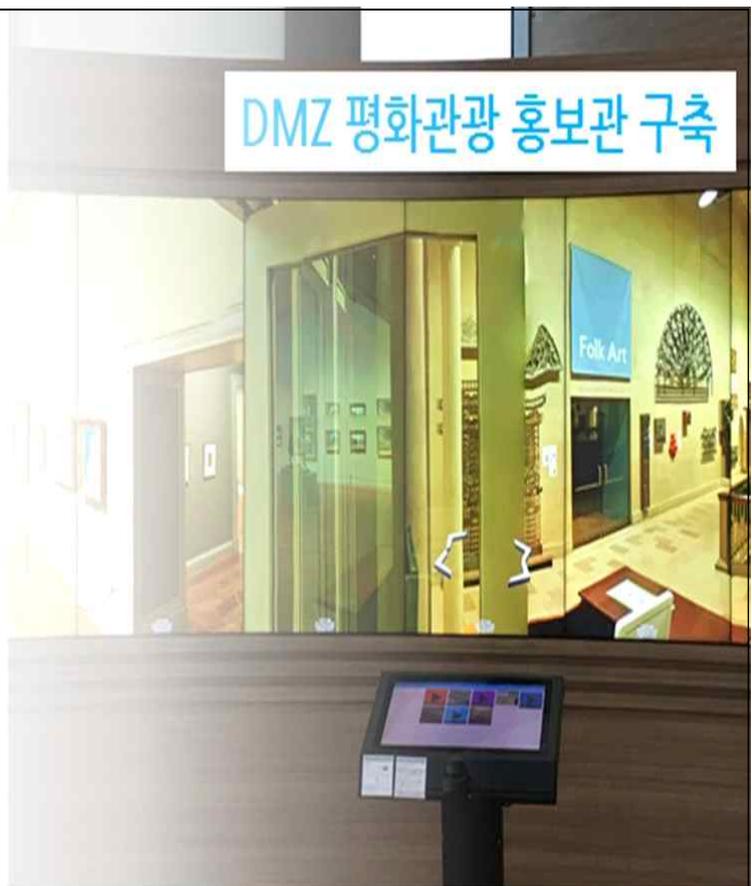
○ DMZ 동/식물 VR체험관 구축

- DMZ지역내의 식물/동물 등 생태계 VR체험관 구축
- DMZ지역내의 식물도감 및 동물도감 등을 VR을 통하여 생생한 영상을 체험토록 함

평화홍보관

○ DMZ 평화관광 홍보관 구축사업

- 파주 제3땅굴전시관에 DMZ 평화존을 구글 리퀴드갤럭시 시스템으로 소개
- DMZ를 드론으로 촬영하여 살아있는 자연생태계의 보고를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존으로 개발



기대효과

○ 외국 관광객 유치효과

- DMZ는 세계적인 평화관광 콘텐츠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평화 브랜드
- 외국 관광객을 체류형(1박 이상)으로 유치함으로써 DMZ지역을 평화존으로 발전 가능

○ 지역경제 활성화

-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DMZ 체험관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지대함으로 외국 관광객 유치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지역민의 외화획득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 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전시관에 외래 관광객이 방문하면 주변 연계 관광지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평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 관광은 평화산업

- 관광산업은 GDP 10%, 일자리 10% 효과를 창출하는 평화산업
- DMZ 지역의 평화생태관광을 통한 한반도 평화지대를 글로벌 평화지대로 발전

○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평화관광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평화관광 일자리 창출

- DMZ 지역의 평화관광자원 조사연구, 개발, 스토리텔링, 루트개발, 상품 및 마케팅과 평화관광 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초등교육에서부터 평화관광 체험을 통한 미래세대 평화의식 고양

○ 접경지역 '평화'마을관광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실현

- 주민이 참여하고 만드는 평화관광 마을을 통해 접경지역의 주민들과 방문객들 사이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관광' 실현
-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화관광 역량강화 교육으로 주민해설사 양성

지정토론

- **김영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 **박병직** 한반도평화관광포럼 대표
-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함보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김 영 규

(철원역사문화연구소장)

지난 5월 3일 오전 7시 41분 쯤 북한군이 철원군 3사단 지역 비무장지대 내 우리군 GP에 수차례 총격을 가해 우리군이 대응사격을 실시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다. 그로 인해 전방 군대는 비상이 걸렸고 민간인의 민통선 출입이 일체 금지되어 전방지역 논에 못자리를 설치하려던 농민들은 밭을 동동 구르며 어찌된 상황인지 우왕좌왕 했다. 철원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고 그 중에 벼농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벼농사는 일년 중 이맘 때가 가장 중요하다. 벼농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파종과 육묘가 일년 농사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비상상황이 일찍 종료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수년 전인 2016년에는 이보다 더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었다. 1월 6일 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는 2006년 1차, 2009년 2차, 2013년 3차에 이은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극도의 긴장관계로 돌변했다. 미 항모가 한반도에 접근하고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 정부는 중단되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다고 발표했고 전 군은 비상사태에 돌입하였다. 1월 8일부터 철원 안보관광(DMZ평화관광)이 거의 한달 동안 중단되었다. 비수기인데다가 가뜩이나 추운 날씨에 철원군 관광은 완전 개점휴업이었다. 이렇게 남북 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무엇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곳이 접경지역이다.

박근혜 정권 당시 극단적인 대립으로 살얼음판을 걷던 남북 간 긴장관계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1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으로 반전되었다. 4월 27일 개최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의 판문점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에 관해 의논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 발표됐다. 이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9월 18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가 발표되었다. 그리하여 철원지역 비무장지대 태봉국도성 남북간 공동발굴과 화살머리고지 6.25전사자 공동발굴 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었고 철원지역 주민들은 이를 계기로 남북간 긴장 완화는 물론 교류 확대 그리고 평화관광의 증대 및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잔뜩 기대가 부풀었다.

하지만 2019년 2월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별다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더 이상의 남북관계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유엔의 대북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은 더욱 고립되었고 경제상황이 악화되었는데 우리정부는 이러한 제재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그중 강원도민들을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일어난 금강산 개별관광 추진이 대표적이고, 동해선 삼척~제진 구간 연결 사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새롭게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작년 9월 발병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경기북부지역에 번지고 DMZ와 민통선 내에 있는 야생 멧돼지들의 사체에서 병원균이 발견됨에 따라 외부관광객 민통선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고 평화관광(안보관광)은 아예 9개월 째 중단되었다. 거기다가 지금 대유행 중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완전히 폐업 상황이다. 사실 접경지역은 이런 비상 상황이 벌어지기 전부터 군대 병력 감축과 군부대 철수로 지역 상경기가 30% 이상 위축되었고 이래저래 접경 지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수십년간 뿌리박고 살아오던 지역주민들이 터전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이나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묻혀있는

실정이다.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되고 특히 접경지역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남북통일 이전에 접경지역이 먼저 고사되는 통탄스런 일이 벌어질 판이다.

작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민통선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DMZ 평화관광이 중단되기 전까지만 해도 철원지역 평화관광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차고 고무적이었다. 필자는 2013년부터 철원의 기존 안보관광 틀을 깨고 새로운 모델의 DMZ 평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대처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동안 1980년대부터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해왔던 냉전과 이데올로기 대결이라는 틀 안에서 진행되었던 안보관광이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러나 어떻게 바꾸고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였다. 그냥 무조건 평화관광과 통일을 외칠 수는 없는 형편이었다. 관광이 통일교육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필자는 지난 2005년부터 15년 동안 철원지역 향토사를 조사·연구하고 특화된 지역 콘텐츠 개발 및 저술활동에 전력했다. 철원은 수복지구이다. 6.25전쟁 전에는 북한땅이었다가 전쟁 후 남한으로 편입된 지역이다. 그러한 특성으로 전쟁 중에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말없이 이유없이 희생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희생되었는지 알 수 있는 공식 자료는 없고 그저 희생자 후손들 증언으로 추정만 할 뿐이다. 철원군은 공산치하 5년, 전쟁기간 3년 그리고 미 군정기간 1년 해서 1945년 해방 때부터 1954년 민정 이양 때까지 역사가 없다. 도시가 없어졌고 사람들이 사라졌으며 기록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증발되었다. 그래서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경험담을 일일이 인터뷰하였고 현재 100여명의 구술기록들이 축적되어 있다. 사라진 잊혀진 10년 역사를 복원한 셈이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분단과 전쟁의 기억들이 이제는 DMZ평화관광을 주도

하는 중요한 아이টে으로 자리잡았다. 2018년 가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또는 민주시민교육 담당 장학사를 비롯한 각급 학교장들을 대상으로한 철원 DMZ통일연수 프로그램이 2019년 12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1,000여명이 다녀갔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 평화·통일 탐방 프로그램을 연이어 진행하려 했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 사태로 전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반기에 다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나 실제 실행될 지 염려스럽다. 철원 DMZ 연수에 참가한 교육계 최고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이제까지 몰랐던 철원을 새롭게 발견했고 전쟁 상황에서 일반 민초들이 겪었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꼭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다는 호평을 받았다. 그 어느 교육기관에서 받았던 통일교육보다도 가장 현실적이었고 피부에 와닿는다는 평가들을 들은 바 있다. 어찌되었든 철원만이 가지고 있는 수복지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전쟁으로 인해 엄청난 불행이 일어났고 6.25전쟁이 발발한지 70년이 되어가지만 전쟁의 트라우마는 남아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의 실상을 느끼면서 다시는 이땅에 전쟁과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된 듯하다.

접경지역 철원군의 관광은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전까지 안보관광이라고 불려왔던 DMZ평화관광인데 이는 두가지 권역으로 나뉜다. 그중 첫 번째가 철원군의 서북쪽 전방지역을 둘러보는 코스로서 노동당사, 제2땅굴, 평화전망대(태봉국도성), 백마고지, 화살머리고지 등지를 둘러보는 코스이다. 경원선 연장으로 이미 많은 수도권과 인근 시민들이 다녀갔고 꾸준히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두 번째는 철원동북쪽 지역인 김화읍 생창리 지역에 조성된 DMZ생태평화공원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로서 6.25전쟁 최대 격전지인 오성산과 65년 이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용양보의 생태를 탐방하고 일제강점기 금강산가던 철길을 뚜렷이 볼 수 있으며 북한에서 내려오는 화강(花江) 최상류에 위치한 남방한계선 최전방 철책을 직접 만져보면서 분단의 현실을 느껴보는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부류는 철원군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한탄강 일대를 둘러보는 코스로서 직탕폭포, 송대소, 승일교, 고석정, 순담 등지가 대표적인 명승지이자

관광지로서 곳곳에 화산지형에 걸맞는 주상절리 기암절벽이 펼쳐져 있어 래프팅과 얼음트래킹을 통해 보고 즐길 수 있다. 그리고 곳곳에 철원지역에만 자생하는 야생화군락이 존재하고 군데군데 주민들의 애환이 깃든 슬픈 이야기도 담겨있다. 네 번째 부류는 청정한 전방지역 용암대지에서 생산되는 철원오대쌀과 파프리카, 토마토 등의 농산물을 직접 살 수 있는 농촌 체험관광 프로그램도 완비되어 있다. 주말마다 노동당사 앞에서 열리는 DMZ마켓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손수 재배한 농작물을 직접 살 수 있다. 이외에도 금강산가던길, 겸재정선그림여행길, 세종강무행차길, 지질사이트 탐방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필자는 2018년과 지난해 평화·통일 교육의 성지로서 철원군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방문자들을 위한 교육자료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했고 탐방 코스도 일정에 따라 대상에 따라 콘셉트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끔 마련한 상태이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잠시 중단된 상태지만 종식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는 해놓았다. 최근 느낀 것이지만 남북 대립과 대결상황에서의 접경지역 관광은 획일적이고 인위적이고 동원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남북이 교류 협력하는 평화 시대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은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통일의 부푼 꿈을 키워가고 못 가본 미지의 세계인 북한 땅을 언젠가는 밟아보리라는 희망을 안고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추진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길만이 접경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영원히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수년 전 철원군을 찾은 관광객 500여명을 앙케이트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 하나가 철원에 관광을 와서 어떠한 점이 가장 좋았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가장 많은 대답이 지평선 끝까지 보이는 광활한 DMZ를 보며 가슴 한편으로 울컥 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답은 흰눈이 내린 겨울철 인적이 끊긴 민통선 농토 안에서 노니는 두루미들을 보면서 이러한 풍광은 영원히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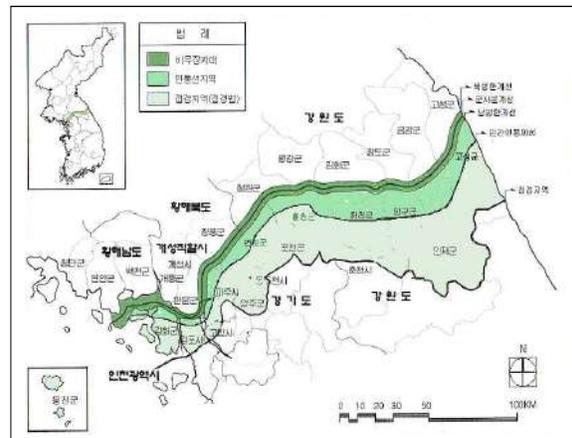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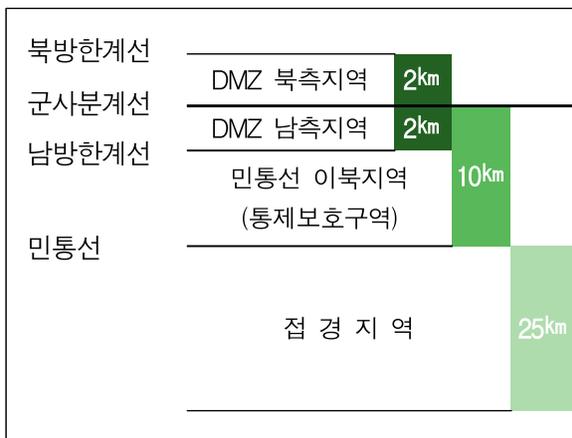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박 병 직

(한반도평화관광포럼 대표)

I. DMZ 평화관광의 개념과 의미

□ DMZ의 공간 개념 및 분포도



- 길 이 : 동서 248km(155마일)
- 면 적 : 907km² (2억 7천평) 한반도 전체 면적의 1/250
- (타임지) 아시아에서 꼭 가 봐야 할 명소 25곳, (론리 플래닛) 세계 500대 관광지로 선정
- 미국 대통령, 각국 총리, 구글회장 에릭 슈미트, 유튜브 창업자 스티브 첸 등 다수의 세계 유명인사 방문하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 DMZ의 개념 변화

○ 새로운 의미와 테마가 있는 PLZ(Peace Life Zone)로 개념 변화

- 스토리 부여를 통해 기존 관광자원에 평화와 생명을 붙여넣은 PLZ(평화생명 지대)로 개념 변화



○ PLZ에서 PLDZ으로 개념 확장 필요

- PLZ에서 PLDZ(Peace Life Dream Zone)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의 실현을 위한 꿈의 지대로 개념 확장 및 적극 활용 필요

□ DMZ의 의미와 가치

○ 안보 및 다크투어리즘적 가치

- 전쟁관광(War Tourism), 암흑관광(Dark Tourism)을 통해 전쟁의 상처와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다짐의 장소

○ 생태관광적 가치

- 총 2,716종의 야생동식물 서식(67종의 명종 위기종 포함), 70종의 희귀특산 식물, 습지 보호를 위한 람사르 국제협약에 국내 최초로 등록한 대암산 용늪 등 생태관광자원의 보고

○ 역사문화적 가치

- 국가지정문화재 60개, 지방지정문화재 110개, 문화재 자료 30개 등 총 200여 개의 지정문화재 존재 및 영화, 연극, 소설 무대

○ 레저 스포츠, 축제 및 이벤트 자원적 가치

- DMZ트레킹, 자전거 투어, 철책선 걷기, 마라톤 대회, 평화 누리길 등 조성
- DMZ캠핑장 조성, 각종 축제 및 DMZ인간 띠 잇기 이벤트 개최

○ 한반도 평화자원적 가치

- DMZ평화의 길, 세계평화공원, 세계평화지대 조성 등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 공간

□ DMZ평화관광의 개념 정의

○ 관광의 개념 정의

- 쉴레른 (H.schulern,1911년)(최초의 정의) : “관광이란 일정한 지역 혹은 타국에 들어가 머물다가 나가는 외래객의 유입, 유출의 형태를 취하는 모든 현상과 그 현상에 직접 결부되는 기타현상, 그중에서도 특히 경제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 <관광사업개론> 정현철 편저: “관광이란 사람이 일상의 생활권을 떠나 다시 돌아올 예정으로 타국이나 타지역의 문물,제도,풍물 등을 관찰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연풍경 등을 감상. 유람할 목적으로 여행하는 것”.

○ DMZ평화관광의 개념 정의

- DMZ평화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DMZ평화관광의 개념정의 필요
- 필자의 정의

“DMZ평화관광은 거주지 또는 일상 생활권을 떠나 DMZ생태자원, 역사문화, 다크투어리즘과 분단의 현장 체험을 통해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 한반도 평화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분단의 극복에 기여하는 관광이다“

[기고]평화의 성지 판문점, 평화관광의 메카로

news 1 뉴스
KOREA

2018-05-08 12:09 송고

■ 박병직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통일부 통일교육위원)

□ 화천 DMZ평화관광 상품 출시 운영

- 2017년 5월 12일 춘천역을 거점으로 한 화천, 양구 DMZ평화관광 상품 출시 운영(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장 재직시)



□ DMZ평화관광 상품 현황

- 해외 현지여행 상품 현황
 - 일본, 중국, 동남아, 유럽, 미주 등지에서 방한 상품에 DMZ 연계 패키지 상품 판매
 - 옵션, 반일, 전일, 2박 3일- 19박 20일 등 다양
- 국내여행사 관광상품 : 9개 여행사 60여개 상품
 - 파주, 연천, 철원 등 특정 지역 당일 방문여행 상품 중심
 - DMZ 관광주식회사(19개), 현대아산(7개), 인터내셔널관광 여행사(9개), 판타스틱투어(2개), KTB대한여행사(5개), 판문점트래블센터(4개) 등
 - 중앙고속 여행사 파주 임진각에서 도라산 전망대, 제3땅굴, 도라산역 등 순환 셔틀 관광상품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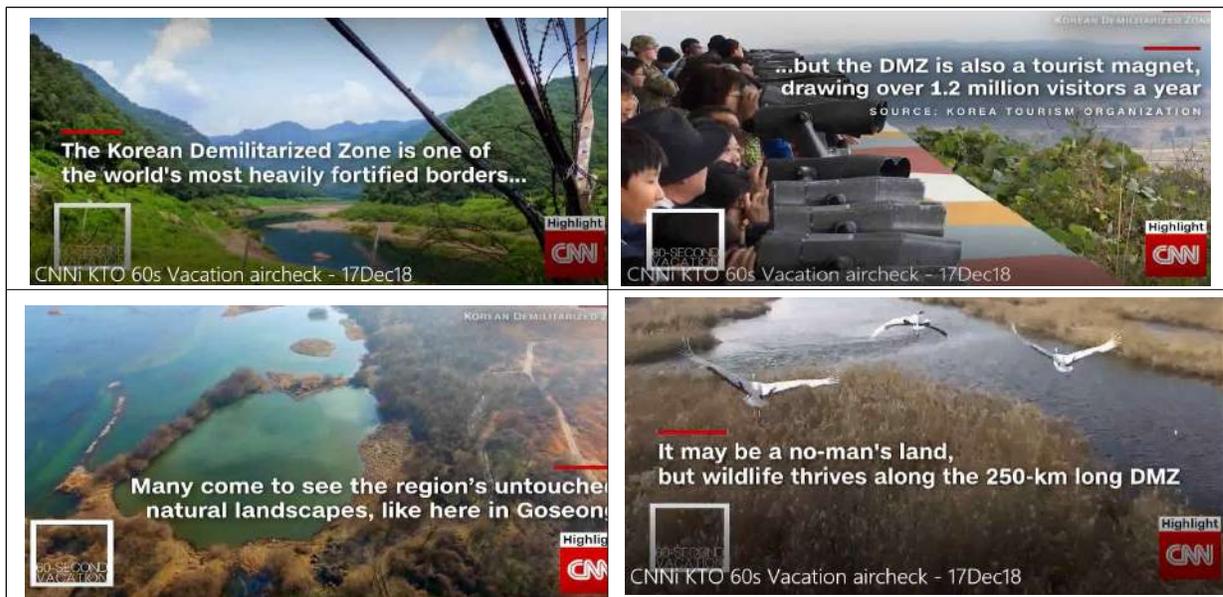
□ #LoveforDMZ 글로벌캠페인 전개(2018-2019)

-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관광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글로벌 광고 캠페인 ‘러브포DMZ(#LoveforDMZ)’
- 캠페인 부제: "Have you ever Dreamed of the Marvelous Zone, DMZ? (이런 경이로운 곳(DMZ)으로의 여행 꿈꿔보셨나요?)”
- DMZ관광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손가락하트(Finger Heart) 사진과 메시지를 공식 온라인 사이트(www.lovefordmz.com)에 업로드 후 추첨을 통해 항공권, 숙박권 기념품 제공

□ CNN Travel 60초 광고(2018-2019년)

- 한국관광공사 CNN에 DMZ CF광고 시행

- CNN Travel에 섹션에 60초 짜리 DMZ동영상 광고 실시



□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 DMZ평화의 손잡기 행사 개최

○ 2019.4.27., DMZ고성에서 강화까지 50만명 참가, 인간띠 잇기 행사 개최

- DMZ브랜드 이미지 확산 및 접경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



III. DMZ평화관광의 문제점 및 개선발전방안

문 제 점	개선 및 발전방안
<p>1. DMZ평화관광 콘트롤 타워 기능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지자체, 공공 및 민간기관 등 다양한 DMZ협의체를 구성했으나, 실행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평화관광의 콘트롤 타워 가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과의 협업체계 강화, - 지속가능하고 실천가능한 사업 우선 실시 - DMZ접경지역 방문객의 통계관리 필요 (현재의 육해공 관리 통계, 관광지식 정보시스템에 등재- DMZ전역의 각 지자체 종합통계 집계 필요, 판문점 방문인원 통계 관리도 필요)
<p>2. DMZ평화관광의 가치 창출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 참여 및 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광 참여 기회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관광의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창출을 위한 방향으로 DMZ관광 발전 방안 모색 -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DMZ관광 향유권 확대 - 한반도 평화의 사회적(국가적)가치 향상
<p>3. DMZ평화관광의 콘텐츠, 상품개발, 융합개발 및 홍보마케팅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상품 구성이 주로 전망대, 땅굴 등 단순 관광형태로 구성, 체험 관광 요소 미흡 - 주로 단순 당일관광에 치중 및 숙박시설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평화관광의 신규 콘텐츠, 융합상품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적인 관광산업과 타 산업분야의 콘텐츠나 자원의 창조적 결합과 복합화 ⇒ 관광산업 혁신, 신산업 발굴 및 부가가치 창출 - 생태관광 + 레저스포츠, 모험, 농촌, 쇼핑관광, 음식, MICE, 의료, 한류, 산업, 스마트관광, 다크투어리즘 등과 융합관광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증대 및 부가가치 창출 - 다크투어리즘 동기유형을 고려한 콘텐츠 개발 (내적요인: 유산, 역사, 죄의식, 호기심, 죽음, 향수/외적요인: 교육, 회상, 공예품, 지역신성화) - 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병영체험 재도입 운영
<p>4. DMZ 관광의 규제 및 제약 사항 수시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긴장 국면에 따라 군부대의 예고 없는 방문 통제 - 안보관광 지역별로 출입 절차 및 허가사항 차이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출입 절차 및 규제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에서 예측하지 못한 비상시를 제외하고 출입 통제 사전 예고 - 여행사에서 군에 사전 통보한 단체관광객은 최대한 출입 허용 - DMZ 철책선 탐방로 및 촬영 지역 확대 (안보관광지별 포토존 설치 및 확대)

문 제 점	개선 및 발전방안
<p>5. DMZ관광거점지역 및 중심센터 기능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 홍보 및 종합 정보 서비스 제공 기능 미흡 	<p>○ DMZ관광의 거점센터 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기능, 생태거점, 숙박기능, 통일교육, 관광상품을 연계한 DMZ거점 기능 강화 - 거점센터에 DMZ명칭의 유스호스텔, 모텔, 식당, 기념품점, 카페, 안내센터 등 시설 조성 - DMZ홍보효과 확산 - DMZ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국,영,일,중) <p>예) 베트남의 중부도시“후에”시에 DMZ명칭의 다양한 시설 운영</p> 
<p>6. 통일교육차원에서 DMZ 현장교육 활용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교육시 DMZ분단 현장방문 프로그램 운영 필요 	<p>○ 통일교육, 단체 행사시 DMZ분단 현장 교육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DMZ현장체험 학습 확대(교육부, 교육청, 각 지자체 협력 강화) - 통일단체, 협의회, 포럼, 연구 단체 등의 각종 포럼, 세미나, 팸투어 등 DMZ현장 실시 확대 <p>통일신문 2020.05.17 [16:04]</p> <p>박병직 통일교육위원, 한반도평화관광포럼대표</p> <p>[통일광장] 통일교육, DMZ현장교육을 강화하자</p>
<p>7. 아프리카 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에 따른 관광중단 수시 발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사 등 업계 경영난 및 접경지 경제 침체 발생 	<p>○ 전염병 상황에 따른 관광의 탄력적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관광객이 아닌 개별관광객(2-3인) 및 가족단위 관광객 허용 검토 - ‘DMZ 나홀로 여행’등 신규 콘텐츠 발굴 필요
<p>8. DMZ관광의 ICT기술 및 스마트 관광활용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관광지에 비해 스마트관광 추진 미흡 	<p>○ DMZ관광의 스마트 관광 활성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MZ전용 앱 개발 운영, 다양한 SNS수단 활용홍보 - AR&VR체험관광 기술 도입 - DMZ모바일 스탬프 투어 도입 등
<p>9. DMZ의 남북공동활용 및 상품 개발 미흡</p>	<p>○ 판문점 및 DMZ남북 공동 활용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내 도보다리 관광 재개 및 남북지역 자유관광 재개 추진(남북관계 추이에 따라) - DMZ남북공동 자원조사 - DMZ통과 개성,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 DMZ접경 10개 시·군 거점별 남북 연계 관광 방안 모색 등(중장기적)

남북접경지역 협력과 DMZ 평화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이 해 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개요) 정부가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신경제구상’의 핵심인 ‘3대 경제협력벨트’(환동해 경제벨트, 환황해 경제벨트, DMZ 환경·관광벨트) 가운데 DMZ 환경·관광벨트는 ‘한반도 생명공동체’구축과 관계가 깊음
 - 문 대통령은 2019년 생명공동체 구상과 남북접경지역 협력 구상을 제안(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제마이네 차이퉁'(FAZ) 기고문, 2019.5.7)
 - 나아가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해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밝힘(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 2020.5.10)
- (단기 과제) 정부의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구상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필요가 있음
 - 남북관광 협력 확대를 고려하여 DMZ를 ‘한반도 생명공동체’를 위한 중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군사적 개념에서 생태·평화, 역사문화 자원과 연계한 미래 지향적 ‘Peace Life Zone’의 개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중앙정부는 물론 강원도, 경기도 등 접경지역 지자체 중심으로 생태 관광 인프라 구축, 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임
-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이 포함된 것 역시 주목할 부분임
- 북한 입장에서도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 DMZ ‘스마트 관광’ 체험관 건립도 검토할 수 있음

- 유망한 ICT 기술을 체험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제작한 ‘관광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 설계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북협력의 미래지향성을 상징할 수 있는 ‘스마트 관광 체험관’을 DMZ에 건립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번영시대를 견인할 수 있음
- 주요 관광지, 문화유산, 축제, 박물관, 전시장, 음식, 쇼핑, 교통 등과 관련된 실감형 콘텐츠를 제작, 전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관광객 유입을 목적으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관광 체험관’을 건립하고, 상징성을 적극 상품화할 수 있음

- ‘스마트 경험’과 관련된 남북협력을 ‘VR 투어’ 형태로 전개시킬 수 있음

- ‘VR 투어’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관광산업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제반 활동을 의미함
-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법·제도 정비, 산학연 연계 기술개발 등 VR시장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북한도 최근 교육부문에까지 VR기술을 도입했다고 선전⁴⁾하는 등 각 분야에 VR 적용을 가속화하는 분위기임.

4) 『노동신문』(2018. 12. 20).

- VR 기술의 도입과 경제성장, 산업발전이 긴밀히 연결되는 상황에서, 'VR 투어'추진은 장기적으로 남북 산업 다방면의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대북제재 국면에서도 '콘텐츠'제작이라는 형태로 남북이 협력을 도모해 볼 수 있음
 - 예를 들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협력을 'VR 콘텐츠'를 통해 시작할 수 있음
- (중기 과제) 해외 여행사에서 판매중인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활용하여 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해외 여행사의 기존 남북 연계관광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에는 직항로가 개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이 남북을 모두 관광하기 위해서는 중국 베이징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관광객이 이동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음
 -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 20일 통일부의 '북한 개별 관광 3대 제안'에서 육로관광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⁵⁾
 - 남북 육로관광을 위해서는 남북한 당국과 유엔군사령부 간 협의를 통해 남북한 주민뿐만 아닌 외국인 관광객이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향후 군사분계선을 통해 북한 개성과 고성(북)과 남한 파주와 고성(남) 등으로 왕래가 가능해지면 기존보다 다양한 남북 연계관광상품들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5) “정부 ‘휴전선 넘는 남북 직접관광’ 카드도 꺼냈다”(한국일보, 2020.1.2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01519022631?did=NA&dtype=&dtypecode=&prnewsid=\(검색일: 2020.5.14\)](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201519022631?did=NA&dtype=&dtypecode=&prnewsid=(검색일: 2020.5.14)).

- 지자체들은 지역여행사와 북한 관광상품을 다루는 해외 여행사 간 협력을 강화해 북한 관광과 연계한 상품들을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현재 해외 여행사가 판매 중인 기존 연계상품은 대체로 비슷한 관광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
 - 북한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고 베이징을 경유, 남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과 대구, 경주, 부산 등을 방문하는 등 주로 경부선 노선을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육로관광이 가능해지면 강원도로의 입국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강원도에서 여타 지자체로 다양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
 - 특히, 최근 북한 당국이 원산갈마국제공항이나 어랑비행장, 삼지연비행장 등을 관광에 활용하고 있는 만큼, 남한 지자체들도 지방공항을 활용한 연계상품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중장기 과제)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성평화관광** : 개성공업지구의 평화관광지대화도 고려할 수 있음
 - 오랜 기간 남한의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등 남북접경지역에 위치한 15개 지자체들은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 일대의 남북분단 관련 시설 및 지역을 통일안보교육을 목적으로 안보관광에 활용해 오
 -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후 기존의 ‘안보관광’을 ‘평화관광’으로 전환시키고, 비무장지대를 ‘평화관광지대’로 조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음
 - 2016년 2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조업 재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공업지구 일대를 둘러보는 것은 대북제재의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음
 - 특히, 정부가 이산가족과 사회단체의 개성·금강산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남북관광이 이루어졌던 개성시내 뿐 아니라 개성공업지구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남북 당국 간 협의만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성공업지구 2~3단계 개발 계획에 관광지 개발 계획이 포함된 만큼, 향후 남북경협이 재개되면 부지 중 일부를 평화관광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 할 수 있음

- **역사·문화관광** : 역사·문화관광상품은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한반도가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 온 지역임을 자각 시켜주고, 남북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품임

- **(역사탐방상품)** 한반도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남북 문화관광자원을 결합한 상품

- 남북은 이미 2000년대 개성관광을 통해 북한 역사탐방상품을 내놓은 바 있고, 해외 여행사는 남북연계상품에서 우리의 서울과 경주 등을 방문해 조선 및 신라 시대 유적지 탐방을 계획하고 있음

- 향후 서울-개성-평양으로 이어지는 ‘조선-고려-고구려 수도관광상품’이나, 경주-서울·공주·부여·익산-평양을 잇는 ‘삼국시대 관광상품’ 등을 계획할 수 있음

- 또한, 북한의 사찰자원을 활용한 남북 사찰탐방도 개발할 수 있음

- 북한은 묘향산 보현사, 개성 영통사, 정방산 성불사, 구월산 월정사 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강산 신계사의 경우 관광상품에 등장하지는 않으나 남북협력으로 재건한 대표적인 사례임

- 묘향산 보현사 외의 대부분 사찰이 평양시 이남에 자리하고 있어 남한에서 도로로 접근이 용이한 편임

- 특히, 북한은 사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템플스테이’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북한 사찰을 방문했던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한 템플스테이 상품을 기획해 볼 수 있음

- **(음식관광상품)** 음식관광은 지역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 산지를 찾아 체험하는 ‘자연관광’, 음식·와인·농산물 등을 주제로 열리는 지역 축제를 포함한 ‘이벤트축제관광’, 음식 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관광’, 현지음식을 즐기는 ‘미식관광’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 방문 시 고려 요인 (중복 선택)은 쇼핑이 63.8%, ‘음식/미식 탐방’(57.9%)으로 나타남
- 특히 ‘음식/미식 탐방’은 2014년 41.1%에서 2018년 57.9%까지 증가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⁶⁾
- 남한 지자체에서는 음식테마거리, 한국전통음식문화체험관 등을 조성하고 음식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관광을 펼치고 있음
- 북한 또한 해외 여행사들이 음식관광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중국 여행사 Koryo Tours의 ‘북한 맥주 양조장 투어’와 러시아 여행사 Vand의 ‘북한 미식 여행’상품이 대표적임
-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평양을 중심으로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미래과학자거리의 ‘룡성’(피자집), 만수교청량음료점 등 각종 식당 시설을 확충, 2012년에는 《조선료리》라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북한의 식문화와 전국의 주요 식당들을 홍보하고 있음
- 남북은 한반도 음식문화 홍보 차원에서 관광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맛집탐방’과 같이 단순 먹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서 펼쳐지는 음식 축제 및 체험행사를 결합한 상품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6) 한국관광공사(2019),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p. 34.

- 웰니스 관광 : 최근 남북 모두 의료관광이나 웰니스관광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음
 - 남한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해 2017년부터 한방, 힐링(치유)·명상, 뷰티(미용)·스파, 자연·숲 치유 등 4개 테마별로 웰니스 관광지를 선정해왔으며, 2020년 현재 총 41개소를 지원하고 있음
 - 북한의 경우 온천을 중심으로 의료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음
 - 북한 지역에는 남포 룡강온천, 평안남도 양덕군 양덕온천, 함경남도 경성군의 경성온천, 주을온천 등 유명한 온천들이 있음. 최근에는 양덕군에 양덕온천문화휴양지가 조성되어 북한 온천관광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음
 - 또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북한의 유경안과종합병원과 유경치과병원, 평양산원유선종양연구소 등에서 백내장 수술과 임플란트, 유선종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함⁷⁾
 - 남북한은 전국 각지의 온천 및 숲 자원과 한방, 힐링·명상, 뷰티·스파 시설 등을 활용한 웰니스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음
 - 남한은 뷰티·스파 시설과 관광상품 개발에, 북한은 온천이나 숲 등 자연 자원에 강점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남한의 웰니스관광상품은 한 지역에 체류하며 다양한 웰니스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남북 지역 간 연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장기 과제) 동서해축을 중심으로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동서해 공동특구 조성을 고려해야 하며, 이 가운데 환동해 관광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함

7) “북한, 의료관광 내세우지만, 최대 고객 중국은 ‘글썸을시다’”(중앙일보, 2019.12.16), <https://news.joins.com/article/23657930>(검색일: 2020.5.14).

-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동서해공동특구를 新남북경협 모델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부의 한반도신경제구상과 북측에서 발표한 ‘경제개발구’ 정책을 고려하여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동해측과 서해측의 통일경제특구 실현 계획을 수립할 필요
 - 동해측의 원산-금강산 특구를 중심으로 북측의 현동공업개발구, 신평관광개발구와 연계한 특구 개발을 고려
 - ※ 이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로드맵에 포함된 환동해 크루즈 등 관광협력과 연계할 필요
 - 서해측의 개성공업지구를 중심으로 북측의 강령국제녹색시범지대와 연계한 특구 개발을 고려, 또한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기존 경협 사업의 재개는 물론, 새로운 경협 모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DMZ · 접경지역 남북 협력, 한반도 평화 · 번영의 마중물

조 한 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 DMZ와 접경지역의 가치

■ 평화 가치

- DMZ 전체 그 자체로 거대한 전쟁기념관, 접경지역은 한반도 분단사의 거울의 의미를 내재
 - DMZ의 각종 군사시설 및 장비들은 군사적 위협성이 제거되는 한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를 내재
 - 접경지역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냉전문화의 역사적 기억의 공간에 해당
- DMZ는 동존상잔과 이념간 극단적 대립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기억과 성찰의 장소, 교육의 장소로서 의미를 내재함.
- DMZ의 평화지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적 냉전을 종식시키는 역사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 자리매김이 가능함.
-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협력은 한국적 평화문화의 아이콘, 세계 평화생태의 랜드마크로서 위상 정립이 가능함.

■ 변영 가치

- DMZ와 접경지역은 남북을 물리적으로 단절시킴으로써 분단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형성하고 남북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
 - 유라시아 대륙 경제권과 태평양 해양 경제권의 교류를 구조적으로 단절
- DMZ와 접경지역을 소통과 연결의 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변영의 중심공간으로 전환이 가능함.

■ 생태 가치

- DMZ와 접경지역은 백두대간 종축 생태축과 함께 한반도를 횡축으로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기능하고 있음.
- DMZ와 접경지역은 유라시아 대륙과 일본, 태평양 해양권을 연결하는 동북아 생태 거점의 기능을 내재함.

■ 세계 유산

- DMZ는 이미 전세계인의 기억속에 각인된 국제적 장소라는 점에서 남북한만의 문제를 넘어서는 의미를 내재함.
 -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이 이미 DMZ의 평화적 이용 또는 세계평화공원 등의 구상을 제시, 이미 전 세계 평화 생태 애호가들의 핵심 중요 장소로 각인

II. 추진 방안

1. DMZ 국제평화지대화

■ 유엔 결의

- 유엔총회와 유엔안보리의 결의 등을 통해 DMZ 국제평화지대화에 합의를 도출함.
 - 국제적인 합의를 통해 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제도화

■ 평화관리 UN 실무기구 구성

- 유엔 산하에 가칭 ‘DMZ 평화 특별위원회’ 같은 실무기구를 설치해 DMZ의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감시함.
 - DMZ 유엔사령부 관리기능을 평화적인 유엔의 기구로 이관
 - DMZ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회복
 - 유엔사령부와 같이 DMZ 주권에 대한 제약이 아니라 평화의 유지와 관리에 국한

■ DMZ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협력체 구성

- 국제평화지대화를 위한 남북 공동 가칭 ‘한반도 접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함.
 - 전염병, 수자원 관리 등 당면 접경지역 현안은 물론 DMZ의 국제 평화지대화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 동서독의 경우도 분단기간 접경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에 대해 협의

2. 판문점-개성 평화지대화

- 개성공단 우선 재개 및 2, 3단계 사업을 본격화함.
 - ‘남한의 자본·기술 + 북한의 자원·노동력’의 단순 등식을 넘어 AI 및 4차 산업시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남북 산업단지로 개발
 -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평화경제의 거점화
- 국제공단화를 도모함.
 - 미국, 중국, EU 등 세계 투자자본 및 다국적 대기업 유치

■ 세계 평화협력 지구화

- 평화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을 유치함.
 - 세계 평화대학 및 한반도 평화대학 등 평화교육 시설 유치 운영
 - 세계 청소년 평화캠프, 평화박물관 등을 조성

3. 국제기구 유치

- UN 서울사무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CBD(UN 생물다양성협약) 관련 기구 등을 DMZ 인근에 유치함.
 - DMZ내 인공적 시설의 설치를 지양하고 전체를 벨트 및 하나의 단일 공간으로 인식하여 평화·생태공원화
 - DMZ내 시설 설치시 생태 훼손 및 DMZ 브랜드가치 저하 우려
 - 필요시설의 경우 DMZ 인접 남북 지역을 활용
- 한국 주도로 평화·생태 관련 국제기구를 창설 DMZ 인근에 유치하는 방안을 모색함.
 - 한반도 or 세계 평화연구소 등 평화와 관련된 연구와 활동 기구
 - 한국 주도로 생태·환경, 바이러스 등 초국경협력을 다루는 국제기구를 창설, DMZ 인근에 유치

4.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협력체제를 형성함.
 - 가칭 'DMZ 유네스코 등재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 유네스코 등재 이후 남북 공동관리기구로 발전
 -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조사 사업을 사전적으로 실시

5. 지뢰제거

- DMZ 전체의 지뢰제거에 기술적 한계가 있음.
 - DMZ 지뢰 매설 지도의 제약 및 장기간 방치로 인한 자연적 분산 등
 -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우 주민 생활지역에 지뢰 매설로 지뢰제거의 시급성을 내재, DMZ의 지뢰는 대부분 무인지대 및 생태 우수지역에 매설
 - DMZ 전체의 지뢰 제거시 자연 및 생태계 영향 우려 상존
- 지뢰문제는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되, 필요한 지역을 우선으로 남북 및 국제협력을 통해 제거함.

6. 세계평화의 랜드마크화

- DMZ를 한국형 평화문화의 아이콘, 세계 평화문화의 성지로 발전시킴.
- DMZ 세계평화포럼, DMZ 세계평화상 등 관련 software를 개발 운영
- DMZ 국제위원회를 설립해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활용

7. 접경지역의 남북협력 거점화

- 접경지역을 남북협력의 거점으로 활용
 -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접경지역과 연계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의 시급성
 - 남북 공유하천, 산림 및 생태·환경 등 접경지역 협력 필요성 상존
 - 보건의료, 산림 및 환경, 그리고 접경지역 협력은 모두 비정치적 성격으로 인간안보의 구현에 기여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대북제재와 상충 가능성도 크지 않음

Ⅲ. 고려 사항

■ DMZ와 접경지역 보존 및 활용 설계도 작성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 및 평화지대화를 큰 틀의 보존 및 활용 설계도내에서 진행함.

- 대내적 준비와 아울러 남북이 종합적인 공동조사를 실시

■ DMZ와 접경지역의 브랜드 가치 실현 및 인위적 훼손의 최소화

- DMZ와 접경지역은 전체 그 자체로 브랜드가치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연결된 공간과 벨트 개념으로 인식함.

- DMZ내 인위적 시설의 설치를 금지 내지는 최소화

- 필요시설의 경우 DMZ 인근 남북 접경지역에 설치

■ 평화가치의 구현과 연동

-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 및 평화지대화 조치를 진행함.

■ 생태가치의 구현과 연동

-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의 실행 및 평화지대화 조치가 DMZ와 접경지역 고유의 생태적 기능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추진함.

■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존 및 활용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함.

- DMZ와 접경지역은 평화, 생태, 역사, 관광, 인문학 등 복합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

- 남북한을 넘어 인류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에 세계 차원의 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 필요

■ 참여형 ‘평화의 축제’ 개념 적용

-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를 군사차원의 작전개념이 아니라 남북한과 세계가 경험한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하는 평화의 축제로 승화시킴.
- 평화지대화 전 과정 및 보존과 활용 계획의 수립과정을 개방하여 국민 참여형으로 진행하고, 과정자체를 평화의 축제로 승화시킴.

■ 분단비용의 균등화 개념 적용

- DMZ와 접경지역은 장기간의 분단체제에서 고비용 분단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 개발지체와 제도적 및 생활세계 차원의 제약에 의해 피해를 감수
- DMZ와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 과정에서 분단비용을 균등화하는 개념을 적용함.
 - 접경지역의 발전 및 인프라 개선에 투자
 - 접경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 및 지원의 확대 모색 

DMZ 규율 법제의 현황과 과제

함 보 현

(법률사무소 생명 변호사)

1. 서론

한반도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 DMZ)는 전쟁의 결과 형성된 비극적인 유산이자 분단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재인 동시에, 평화와 생명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다.

DMZ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쌍방으로 하여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⁸⁾(이하 ‘정전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남북 간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준으로 각 2km 이내로 설정된 지역이다.

이 지역을 둘러싸고 본래의 취지와 달리 중무장된 현실과 함께 국내법과 국제법이 중층적으로 규율 체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DMZ에 대하여 남북 쌍방이 주권을 주장하는 영토고권의 충돌과 남북한 특수관계부터 국제법으로서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jurisdiction) 행사와 반환, 국내법으로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의 적용과 관련한 남북합의서의 해석 등이 대표적인 이슈이다.

위와 같은 규율체계의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DMZ에 대한 새로운 거버넌스 도출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법적 과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8) 정식 명칭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2. DMZ에 대한 영토고권과 남북 합의서

대한민국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적시하면서도 제4조에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하여 현실의 분단 상황 아래에서 평화통일을 헌법적 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 역시 한반도 전체가 북한의 영토임을 전제하면서 헌법 제9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인민정권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은 공히 DMZ를 포함한 한반도 전 지역을 자신의 영토에 속한다고 규범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MDL을 기준으로 남한과 북한 지역에 대해 각각 영토고권을 행사하면서 분단을 전제로 상대의 실체는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MDL과 DMZ로 상징되는 분단 현실과 쌍방 영토에 대한 주권 행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통일 지향과 현실적 제약으로 특수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은 1992년 2월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⁹⁾에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고 전제한 뒤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제5조)면서 평화체제로 전환 전까지 정전협정 준수를 규정하고 있다.¹⁰⁾ 남북기본합의서는 덧붙여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등을 협의·추진한다”고 규정하기

9)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0) 이에 대하여,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DMZ의 존속 및 유지가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보장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성호, “DMZ의 평화적 이용에 따른 법적 문제”, 법조 Vol.602, 법조협회, 2006. 11., 134면 참조.

도 했다(제12조). 본 합의서는 남북한 간 합의문서에서 DMZ의 평화적 이용을 언급한 최초의 규정이다.

이후에도 DMZ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제안과 남북 간 합의가 나왔다. 2000년 9월 분단 후 처음으로 열린 남북 국방장관회담 후 공동보도문에서는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개방하여 남북관할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 발표된 ‘9·19 공동선언’의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인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¹¹⁾ 제2조에서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며 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DMZ 내 남북공동 유해발굴과 역사유적 공동조사 및 발굴 등에 대하여 합의하기도 했다.

남북 양측은 공식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토고권을 주장하면서도 뒤에 살펴볼 정전협정의 법적·실질적 유효성과 주권의 제약을 인정하고, 그러한 현실적 제약과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따라 일정한 합의를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선순환적 발전 모멘텀 마련을 강조하면서 남북 상호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에 대한 남북합의 이행을 위한 장치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다. DMZ를 지속가능한 평화지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① 한반도 문제 해결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 간 합의된 ‘DMZ 평화지대화’를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국제평화지대’로 조성, ② DMZ 국제평화지대화 제시로 DMZ 고유의 완충기능을 강화하고 새로운 상호안전

11)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보장기능을 부여하여 남북·북미 합의 이행기반 마련, ③ ‘DMZ 국제평화 지대화’는 한반도를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하여, ‘교량국가’로의 발전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비전’ 실현에 기여 등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이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는 개략적인 로드맵으로 ① DMZ 내 다양한 문화·자연 자원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남·북이 공동 등재, 민족 공동자산으로 함께 보호하고 우수성도 국제적으로 홍보, ② DMZ 종합조사 등 ‘기초조사’ 실시, 유네스코 등재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도출 관련 연구용역 실시, ‘남북공동등재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추진을 구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신년사에서도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공동 등재하는 일은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고, 문화재청 역시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올해 말까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북한과 함께 공동등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남북 간 합의, 잠정목록 선정 및 등재 신청, 자문기구 평가·등재 및 유산 보호·활용 등의 절차는 당장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 아니라¹²⁾, 정전협정에 따른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행사, 이제 종속되어 있는 국내법제, 평화적 이용을 위한 정전협정의 재해석 또는 정전체제의 해소, 소유권 정리를 통한 토지질서 안정화 등 여러 난관과 과제가 존재한다.

12) 북한 선전매체들이 지난 3월 20일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공동등재를 놓고 “민족의 얼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쓸개 빠진 망동”, “비무장지대를 합법적으로 고착시켜 민족 분열과 동족 대결의 비극을 영구화하려는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행위”라고 일제히 비난했다.

3. 정전협정상 군사정전위의 관할권과 남북의 관리권

DMZ에 대한 헌법상 영토주권은 대한민국에 속하지만 현실의 인적·물적 관할권은 정전협정에 따라 구성된 일종의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에 속하며, 보다 구체적인 권한을 양측 군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¹³⁾ DMZ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임은 분명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권을 뜻하는 관할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 하겠다. 남북한은 DMZ의 일부 지역,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군사정전위원회로부터 이양 받는 형식으로 관리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대하여는 본 협정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며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¹⁴⁾을 들어 조약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전쟁의 당사자이자 정전협정의 이행을 담당하고 있는 주체라는 점, 「자연환경보전법」을 비롯한 국내법이 정전협정에 따른 현실의 DMZ 관할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전협정은 국제법상 조약으로서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고 있다 하겠다.¹⁵⁾ 아울러 국제인도법상 DMZ 관련 규칙은 국제관습법상 규범으로 확립되었고 관련 규정이 제네바 협약 제I추가의정서에 존재하며, 남한과 북한이 같은 의정서에 각각 1982년과 1988년 비준·가입하였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¹⁶⁾

정전협정 제1조 제1항은 “한 개의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쌍방이 이 선으로부터 각 2km씩 후퇴함으로써 적대군대 간에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

13) DMZ는 헌법상 우리 영토지만 정전협정에 의해 통치는 군사정전위원회가 하고, 영유(dominium)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지역이라는 설명은 이상희, “세계화와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기본문제”, 사회과학논총 제10집, 명지대학교, 1995, 218-221면 참조.

14) 정전협정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이양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

15) 이효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 제5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84면.

16) 박병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쟁점 및 과제”, 일감법학 제32호,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 269면.

한다. 한 개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여 이를 완충지대로 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MZ는 이렇듯 정전 중 군사적 긴장완화의 목적에서 설정되었으나 중무기가 집중적으로 배치되고 그 범위가 축소되는 등 완충지대로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4년 4월 군사정전위원회 대표를 철수시킨 데 이어 2013년 3월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하는 등 정전협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전협정은 엄연히 국내에 효력을 미치는 국제법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사정전위원회가 DMZ에 대해 실질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 정전협정은 DMZ를 직접 규율하는 국제법 규범으로 구역의 설정, 출입 및 행위 제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민사행정과 구제사업을 중심으로 한 관할권은 MDL 이남 지역에서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이북 지역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제1조 제10항).

이와 함께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이나 군사분계선을 통과함을 허가하지 않으며(제1조 제7항), 상대방 지역 사령관의 허가 없이는 DMZ에 군인이나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제8항). 이와 함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의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얻은 DMZ 출입이 가능하지만(제9조), 출입을 허가 받는 인원수는 각 사령관이 결정하며 허가 인원의 총수는 1천명을 초과할 수 없다(제10항).

결국 남한에서 남한 관할지역인 DMZ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거나 민사행정이나 구제사업을 이유로 유엔군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려면 별도로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북한 관할지역인 DMZ로 들어가려면 다시 조선인민군 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¹⁷⁾

17) 현재 중국인민지원군은 북한에 주둔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선인민군 사령관의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남북한의 인원은 DMZ, MDL 통행을 위하여 유엔사와

남북 간 교류협력이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DMZ의 규범체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DMZ를 통과한 인적, 물적 교류의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같은 해 11월 유엔군과 북한은, 유엔군이 DMZ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행정적 관리권을 남한에 이양하는 데 합의하였고¹⁸⁾, 이에 따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 개방에 관한 국제연합군과 조선인민군 간 합의서’(2000. 11. 17.)를 채택하였다. 동 합의서는 “정전협정에 따라…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일부 구역을 개방하여 그 구역을 남과 북의 관리구역으로 하는 데 합의한다”고 적시했다. 이로써 DMZ에 대한 관할권 외에 남북관리구역에 대한 관리권(administration)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군사정전위원회는 DMZ 전체에 대한 관할권을 그대로 보유하면서도 일부 구역을 지정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군사정전위원회의 관할권 행사와 개별 합의 건에 대한 관리권 이양의 틀은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설정과 남과 북을 연결하는 철도·도로작업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2. 9. 17.), ‘남북 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2. 12. 6.),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통행·통신·통관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합의서’(2007. 12. 13.), ‘9·19 군사분야 남북합의서’(2018. 9. 19.) 등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4. 정전체제를 전제한 국내법 규율

앞서도 언급했듯 국내법은 DMZ를 둘러싼 국제법적 규율과 영토고권 행사의 한계를 전제하여 분야별로 필요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은 제2조 제13호에서 “자연유보지역”에 대해 “사람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생태계의 훼손이 방지되고 있는 지역 중 군사상의 목적으로

북한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 앞서 북한은 DMZ 남북관리지역의 남한지역에 대한 관할권 자체를 남한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유엔군은 관할권 자체의 이양은 불가능하고 행정적인 관리권을 남한에 넘겨줄 수 있다고 답신했다.

이용되는 외에는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무인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과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부터 2년간의 비무장지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정전협정의 실효성과 군사정전위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한 현행법의 유보 규정인 셈이다. 동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유보지역에 대하여 생태계의 보전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나 방침을 수립하여야 하지만, DMZ에 대하여는 그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이후의 시점부터 그러한 의무가 발생한다 하겠다.

다음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MDL 이남 10km의 범위 안에서 민간인통제선을 지정하여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과 일정한 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특히 DMZ를 포함하는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은 원칙적으로 ‘통제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것은 물론 토지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등에 대하여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

이밖에 「국토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의 개별법은 원칙적으로 DMZ 남한 지역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안보와 군사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정전협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5. 평화체제를 위한 DMZ 전환의 과제

정전협정은 한반도에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과도적으로 적용되는 국제 협정으로, 정전 이후 남북 간 군사적 완충지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에서 정전체제가 극복되고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DMZ에는 기존의 정전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규범체계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DMZ가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상징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역설적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생명존중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평화체제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거버넌스의 고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서 살펴보았듯 현재 DMZ는 대한민국 헌법을 뛰어넘어 정전협정이 실질적인 규범체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는 분단과 정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중국에는 DMZ 전체에 대하여 남북한이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관할·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이 DMZ에 대하여 평화와 생명존중의 공간으로서 가치를 인정하고 활용 방안에 대하여 합의하는 것이 이상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다. 주요하게는 관할권 조정과 관련하여 국제연합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가 남한에 관할권을 반환하고 남북이 새로운 거버넌스에 합의하는 방식부터, 유엔·남한·북한이 일괄 합의하는 방식, 남북이 먼저 합의하고 유엔군이 추인하는 방식, 정전협정의 당사자(유엔¹⁹·중국·북한)와 실질적 당사자(남한)가 정전협정 개정에 동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전쟁에 국제전과 내전의 성격이 혼재한 점, 현재 DMZ 관련 규율 역시 국제법과 국내법 및 남북 간 합의가 뒤섞여 있다는 점, 평화체제로의 전환의 효과가 비단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할권의 반환을 위한 협약에 정전협정의 형식적·실질적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실질적 당사자로서 남과 북이 정전체제 해소와 평화체제

19) 정전 협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남한과 유엔’, ‘한국과 참전 16개국’, ‘유엔’ 등의 주장이 있다.

구축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관할권이 남북한으로 온전히 반환된 후에는 남북이 DMZ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합의하고 해당 합의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인 관할권 전면 반환 전에라도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유엔군사령부가 관할권의 일부라 할 수 있는 대북 협상권을 남한 정부에 포괄적으로 공식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DMZ를 둘러싼 평화 정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남북이 유엔군사령부의 관여나 사후 승인 절차를 고려함이 없이 협상을 진행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 합의의 구속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나아가 DMZ의 생태 보전을 위한 잠정적인 국제협약을 우선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DMZ의 본래 개념과 취지에 맞게 해당 지역을 실질적으로 비무장화하는 합의와 실천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DMZ 내 토지소유권을 확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다.²⁰⁾ 전쟁과 오랜 분단으로 토지소유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부터 시작해 MDL 이남 지역의 전체 토지에 대하여 국유화 또는 공유화와 그 범위 및 절차, 매수청구권의 인정, 협의매수, 공용수용의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고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DMZ는 70년 가까이 소유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지역인데다 평화적 이용과 보존의 필요성, 한반도의 평화통일 또는 공존을 위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용수용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국유화를 위한 공용수용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²¹⁾

또한 북한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권의 확정과 보상은 단순히 경제적 보상의 문제를 넘어 북한의 토지개혁과 체제 인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에 신중을

20) 현재 DMZ는 선점의 대상이 되는 무주지(terra nullius)나, 국제공역(international public domain), 국제법상 인류공동의 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도 아니다.

21) 토지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복구하면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안과, 일정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수용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한 주민이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예상되는 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남북 간 합의 후 그 내용을 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²²⁾

더불어 남북 양측이 각각 정치적 결단에 이어 대승적인 합의에 이른다면 DMZ 전역을 한반도, 한 발 나아가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남북 또는 국제기구의 공동관리 아래에 두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DMZ라는 접경 지역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 이곳에서 생태과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발현할 방안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는 물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6. 결어

유엔군사령부는 1971년 제317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북한 측에 DMZ 비무장화 방안을 제의한 바 있고, 유엔환경계획(UNEP)은 1979년 DMZ를 평화와 통일을 위한 협력의 공간으로 이용하자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도 DMZ를 국제 평화자연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 적이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5월 대통령의 세계평화공원 조성 구상에 따라 통일부에 세계평화공원기획단이 조직되는 등 DMZ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다양한 구상이 나왔다. 최근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군사 합의,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DMZ를 둘러싸고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²³⁾

22) 분쟁, 접경지역의 국공유화와 관련하여서는 독일 그뤼네스 반트(Grünes Band)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환경단체 연합인 분트(BUND, 독일환경자연보전연합)는 1989년 12월부터 그뤼네스 반트 운동 전개하여 개인 기부를 통한 사유지 매입과 보전·관리를 위해 ‘초록주식’(상징적인 주식인 기부증서) 모금사업, 토지공유화 적극 추진했다. 그 결과 ① 동독의 접경지역 토지가 연방정부로 귀속(국유화, 반환원칙), ② 1996년 접경토지법 제정, 사유지 증가, 생태계 훼손 우려 고조, ③ 2003년 그뤼네스 반트의 연방토지를 자연보전 목적으로 주정부에 이양하기로 공표, ④ 2005년 ‘국가자연유산’(NNE)으로 지정 등의 과정을 거쳐 접경지역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연방토지가 국가자연유산(공유지)로 보전, 관리 가능하게 되었다.

23)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 곧 비무장지대는 국민의 것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하는 등 DMZ의 평화적 이용은 현 정부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에서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3대 벨트 가운데 ‘접경지역 평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화해와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이러한 계획과 제안은 쉽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그럼에도 DMZ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제안과 함께 그와 관련한 막연한 기대가 나오고 있다.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분단·정전체제를 공고하게 떠받치고 있는 법제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제법과 국내법의 혼재, 남북 관계의 부침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뀌어나가면서 DMZ의 가치를 발견, 발명해내는 것은 지난한 과정이겠지만 꼭 걸어야 할 길이다. 이는 실로 전인미답의 길이 될 텐데 보통 이러한 경우 기존의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 특히 DMZ를 둘러싸고 경제와 개발 논리를 앞세우거나 환경 친화적인 포장(이른바 ‘DMZ Green Wash’)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 DMZ의 생태를 보존하는 동시에 이곳을 평화와 생태, 공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고양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려면 여러 공동체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㉞

화벨트’는 DMZ를 비롯한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을 전제하고 있다.

정책제안, 언제, 어디서든, 쉽게!

PC

STEP 01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검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www.nuac.go.kr>

STEP 02



[통일정책제안]을 눌러주세요.

STEP 03



[통일정책제안]을 누르면, 간단한 개인인증절차를 거쳐 통일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과 '국민' 모두 통일정책제안이 가능해요!

모바일

STEP 01



민주평통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검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https://m.nuac.go.kr>

STEP 02



[통일정책 제안하기]를 눌러주세요.

STEP 03



[통일정책 제안하기]를 누르면, 간단한 개인인증절차를 거쳐 통일정책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자문위원'과 '국민' 모두 통일정책제안이 가능해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통 블로그

+ 이웃맺고 함께 가즈아~



참여방법

STEP1.



포털사이트에서
[민주평통 블로그] 검색

STEP2.



민주평통 블로그와 이웃 맺기

STEP3.



게시물에 공감하기, 댓글달기



우리가 함께 만드는 뉴스레터 <평화통일 특>

스마트폰으로 함께 나누는 민주평통 이야기!
이슈와 정책, 통일생각더하기, 협의회뽐내기,
통일특독 코너에서 자문위원과 행정실장,
사무처 직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아요~

*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nuacmail@naver.com으로 신청해주세요.

* 신청문구: 이름, 전화번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민주평통 페이스북 좋아요!



“페이지 **좋아요** 꾸욱~ 누르고
통일을 함께 이야기해보아요!”



국내외 민주평통 활동 소식



통일관련 주요 이슈 공유



민주평통 공지사항



다양한 이벤트

댓글과 개별 메시지로
실시간 소통해요 ♥



1 페이스북 가입하기

휴대폰 앱스토어에서 Facebook을 찾아 <설치>
<Facebook 가입>을 눌러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끝!



2 <좋아요> 누르기

돋보기모양 <검색> 탭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검색한 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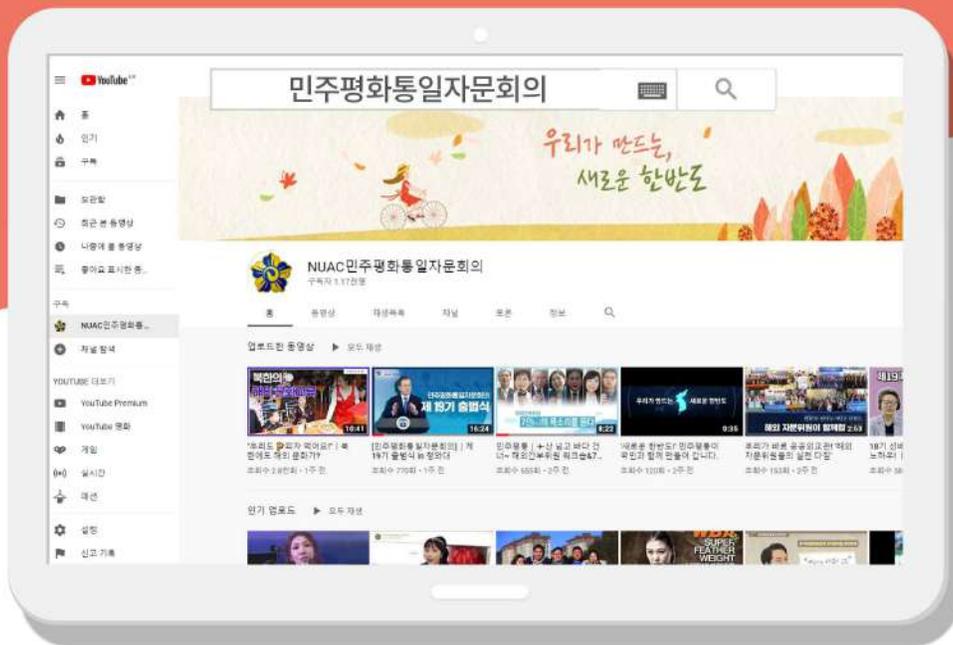


**3 댓글 남기기
& 공유하기**

공감가는 글에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겨보세요.
<공유>를 눌러 다른분과 함께 소식을 나눠보아요!

민주평통 유튜브

평화와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다양한 이야기
나에게 평화란? 당신에게 통일이란?



- 👍 각 지역의 재미난 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 👍 전문가들이 전하는 평화통일을 **똑똑하게!**
- 👍 민주평통의 다양한 소식들을 **폭넓게!**



좋아요나 구독 필수!